

## 인태지역의 안정을 위한 한일중 3국 협력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

**인도** -태평양 지역은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으로써 '신냉전적(New Cold War) 구도'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역내 지정학적 흐름은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 3개국의 역할과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평화연구원은 지난 9월 27일, 2024년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회기간 회의를 개최하였고, 당시 정덕구 NEAR 재단 이사장을 초청하여 기조연설을 진행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JPI 정책포럼으로 발간합니다.

지난 몇 년간 세계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분쟁, 그리고 단절 현상의 여파로 인해 동북아 3국의 교류 협력도 심대한 영향을 받아 왔음.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고 세계 경제는 공급망 위기 속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세계 리더십은 실종되고 있음.

글로벌 거버넌스의 약화 또는 부재 속에서 지정학, 지경학, 지기술학 등 다양한 전선에서 분쟁과 각축이 촉발되고 있음.

## 1. 세계질서의 무질서화와 파편화 현상

- 가장 먼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Geopolitics), 지경학(Geoeconomics), 지기술학(Geotechnologies)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흔들리는 세계질서와 파편화 현상』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지난 몇 년간 세계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분쟁, 그리고 단절 현상의 여파로 인해 동북아 3국의 교류 협력도 심대한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고 세계경제는 공급망 위기 속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세계 리더십은 실종되고 있다. UN, WTO 등 다자 분쟁조정기구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
- 현재 온 세상에서 화재가 발생하듯 갈등 지역마다 전쟁이 번져가고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약화 또는 부재 속에서 지정학, 지경학, 지기술학 등 다양한 전선에서 분쟁과 각축이 촉발되고 있다. 이것은 시대적 전환이었던 세기에 한 번 볼 수 있는 거대한 변화로, 세계화의 종말을 고하고 탈냉전 질서가 종식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오늘날 진입하고 있는 전환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세계가 얼마나 파편화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지속하고 있는 위기와 다가오는 위험이 얼마나 중대한지에 대하여 심히 우려스럽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합위기는 상호 간에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안보적 긴장, 민족주의 등 정치문제를 넘어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총체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며 대응해야 할 시점에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은 향후 10년 동안에 걸쳐 진행될 위험한 전환을 잘 관리하고 경쟁, 대립, 협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장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때로는 과잉대응에서 비롯되는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현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질서 전환을 관리하고 공동이익의 범위를 확장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 세계의 고위 안보전문가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동북아, 특히 한반도, 대만 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현재 다른 지역에서 촉발된 위기와 유사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와 대만해협과 같은 인화점을 둘러싼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은 신뢰구축에 힘쓰고, 가드레일 설정을 통한 행동규범 준수 등 위기관리 메커니즘 정착과 같은 분쟁 예방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핵 억제 시스템을 양자 또는 소다자적 차원에서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 현재 러시아와 북한 간의 공고한 안보협력이 북한 핵위협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북아 지역에서 핵무기의 확산을 통해 인접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장과 호전성에 대해 공동의 대응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계적 이슈들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위험을 헤징(Hedging)해 나가는 데 있어 한중일 3국 간의 인식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우리는 다자주의와 다자기구들이 유효하고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는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다자주의와 다자기구들은 현재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는 표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음 단계의 국제질서와 이를 관리할 보이는 손 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사라진 지금, 대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질서는 더욱 복잡해지고, 동맹과 연대는 느슨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유사입장(Like-minded) 국가들은 소다자주의 또는 복수국가 간의 협정을 체결하여 국가의 안위와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소다자주의는 다자주의를 대체하기보다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삼국정상회의의 결과로 형성된 안보공조 체제와, 이에 대척점에 있는 북중러의 느슨한 소다자 결속도 그러하다. 그러나 북중러 삼각관계는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깨는 데 기여하고 있다.
- 한미일 공조체제의 최대 과제는 북한 비핵화를 공동으로 추구하면서 동북아시아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역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중 간 대화채널 복원, 가드레일 구축, 군사대화의 재개 노력에 합의한 2023년 11월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의 결과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동북아시아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개의 소다자 3각 구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 한미일 3각 구도, 이에 대립하는 북중러 3각 구도,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한중일 3각 구도가 있다. 특히 오늘의 주제인 한중일 협력 구도는 미중 간의 갈등 구도와 깊은 함수 관계에 있다.
- 야망과 절망감이 교차할 때 전쟁의 위험은 커진다. 중국이 2027년까지 경제 회복에 실패하고 국내정치가 불안해지면 시진핑의 야망은 무너질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계적 이슈들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위험을 헤징(Hedging)해 나가는 데 있어 한중일 3국 간의 인식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

*우리는 동북아시아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개의 소다자 3각 구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잘 관리해 나가야 함. 한미일 3각 구도, 이에 대립하는 북중러 3각 구도,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한중일 3각 구도가 있음. 특히 오늘의 주제인 한중일 협력 구도는 미중 간의 갈등 구도와 깊은 함수 관계에 있음.*

4기 집권이 흔들릴 경우 절망감은 커질 수 있다. 이 때가 매우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다. 전쟁의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와 위험이 새로운 충동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막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핵위기, 대만해협이라는 세 가지 폭풍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제적인 압력이 거세게 가해지고 있다.

## II. 미-중간의 경쟁, 충돌, 상호의존성

- 중국과 미국 간의 대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 대립이 오판이나 우발적 사고로 인해 향후 10년 이내에 대만, 한반도, 또는 남중국해 등 역내에서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양국 간의 안정화 노력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많은 한계와 제약이 있겠지만, 그 내부에는 이 대결을 완화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 향후 5년, 내지 10년간에 걸쳐 2023년 11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의 정신에 따라 양국간 가드레일, 방화벽, 위기관리 메커니즘의 확립을 위한 타협과 절충이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 강대국들의 국내정치에서 기인하는 부정적 영향이 양국 관계의 판도를 흔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불씨 하나가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은 양국의 국내 사정에 달려 있다.

### 1. 중국의 현실: China in the perils

- 지금 중국에서는 현재 덩샤오핑 시대의 정치·경제 거버넌스가 무너지면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위험 요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경제적 번영보다 중화민족의 국가정체성 회복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에서 유연성이 약화하고 있다. 그동안 현실성이 결여된 대미국 전략에 몰두한 결과, 이제는 유동성 함정과 증진국 함정에 빠져들고 저성장 경로에 진입하는 등 경제위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 중국경제는 만성적 디플레이션 속에서 수요가 감소하는 한편, 정치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공장을 가동하면서 공급과잉 상태에 빠지고 있다. 저가

수출 등으로 인해 심각한 디플레이션 수출국이 되었다. 지방정부는 모든 자산을 팔아 과잉 부채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 이 문제가 앞으로 전개될 미중 전략경쟁과 헤게모니 게임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시진핑식 사회주의적 경제관의 수정 없이 중국경제의 회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2027년 제4기 연임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의 4연임 여부는 앞으로 3년 이내에 중국경제 회생과 선순환 궤도 재진입 그리고 민생 안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시진핑의 미래는 중국 국민의 민심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 당샤오팡식 정치·경제·사회 거버넌스의 균열

- 중국의 당샤오팡식 오묘한 국가·사회 거버넌스는 두 개의 체제를 단순히 통합하는 것이었다. 하나는 사회주의 공산당통치 체제이고, 둘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였다. 이 두 체제는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 협력하며 더욱 튼튼해 졌다. 그리고 두 체제가 단순한 통합이 아닌 함께 융합하게 되면 공산당도 시장경제도 망할 것이라는 생각은 선견지명이었다.

- 그러나 후진타오 말기와 시진핑 초기 상황에서는 공산당 내부의 권력투쟁과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해 국가·사회 거버넌스가 균형을 잃기 시작했다. 민영 기업의 비중이 커지고 서비스 및 부동산 부문이 확장함에 따라 국유기업은 위축되고 있었다. 제조업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으나 미국의 견제와 의심을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 시진핑은 강력한 공산당지배 체제의 복구와 시장경제 체제의 재균형을 시도했지만, 두 부문의 단순 통합된 실밥이 터지면서 사회주의 공산당 체제가 시장 경제에 침윤되고, 결국 시장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었다.

- 시진핑 주석은 제1기에는 부패척결에 나섰고, 제2기에는 정적 제거, 제3기에는 독재체제를 완성했다. 그는 “치욕의 한 세기”(A Century of Humiliation)을 내세우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아편전쟁 이후 중국인민이 겪은 백 년의 한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하며 미국과 서방 세력에 대한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또한 2008년 세계 경제위기를 미국 월가의 몰락과 미국식 자유자본주의의 붕괴로 설명했다.

- 시진핑의 운명적 경로를 살펴보면 그의 최대 복병은 코로나-19 팬더믹이다. 미국은 중국의 상황론과 중국 책임론을 부각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민심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시진핑 제3기는 모든 책임이 시진핑 개인

시진핑 주석은 제1기에는 부패척결에 나섰고, 제2기에는 정적 제거, 제3기에는 독재체제를 완성했음. 그는 “치욕의 한 세기”(A Century of Humiliation)을 내세우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아편전쟁 이후 중국인민이 겪은 백 년의 한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하며 미국과 서방 세력에 대한 도전을 선언.

에게 귀결되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진핑의 최대 오판은 경제위기 중에 사회주의 처방을 시행한 것이다. 그는 부동산버블 붕괴 과정을 방관하고 이를 사회주의 처방으로 처리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급감했다. 지난 40여년 동안의 중국경제는 과도한 지방정부 부채로 만든 부동산 버블이었다. 이러한 부동산 버블은 제로 코로나정책인 경제봉쇄로 인해 급격히 녹아 내렸고, 일본형 버블 붕괴와 유사한 디플레이션 경제침체로 이어졌다. 이 와중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은 중국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고, 결국 시진핑은 내치 우선을 위해 미국과의 휴전을 희망하게 되었다. 2023년 11월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는 중국의 상황론에 미국의 대선전략이 어우러지며 서로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휴전 선언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중국의 강성외교는 연기되는 것이지 수정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 국내 문제가 더 시급한 시진핑 정부

- 다음 몇 년 동안 중국은 매우 중요한 분수령을 지나야 할 것이다. 이 분수령에서 시진핑의 길과 중국의 길은 확연히 구분된다. 더욱이 시진핑이 가고자 하는 길과 중국 인민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 현재 중국경제는 심각한 히스테리적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 시진핑 3기 이후, 시진핑 1인 공산당 지배 구조하에서 정치와 이념을 시장경제에 반영하려 했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심각한 축소 불균형 상태에 빠지고 있다.
- 이제 시진핑의 길, 중국경제의 길, 중국인민의 길 사이에 심각한 부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인민들이 발언의 자유를 요구하며 전개한 백지 시위(blank paper riot)에서 그 빈 종이에 적힌 중국인민의 길은 생활, 생계, 생존의 3가지 공급 요구였다. 생계(daily life)는 주로 의식주의 충분한 공급을 의미하고, 생활(healthy life by good medical service)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생존(sustainable life support from social pension system)은 사회연금 시스템에 따른 지속가능한 생활지원을 포함한다.
- 이러한 3생이 공급되지 않으면 앞으로 그 백지에는 반공산당, 반시진핑 요구가 적힐 것이다. 현재 강력한 사회통제와 최소한의 생계, 생활물자의 공급이 이루어지며 중국인민 사이에 침묵이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중국경제의 장기침체 조짐이 계속되어 희생의 길을 찾지 못할 경우 시진핑의 길은 심각한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진핑의 꿈과 길은 어느 정도 수정을 요구 받을 것이며, 시진핑

스스로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선택은 시장경제를 다루는 그의 태도가 매우 유연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이 가고자 하는 꿈과 길이 있다 하더라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반복하며 시장과 친화해야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의 대외전략에서도 보다 유연하고 협력적이며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실로 다음 3년은 시진핑의 길에 있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점을 그는 물론 중국 정부 모두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 3Ps(Policy, Property, and Perception)

- 2027년 정치의 계절이 오기 전에 중국경제가 선순환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지는 시진핑 주석의 4연임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중국경제가 앞으로 2-3년 내에 선순환 궤도로 복귀할 것인지에 대해 중국당국은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시진핑의 하드라인 사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궁극적으로 올해 중국경제를 이끌어 갈 세 가지 원동력은 3P인 정책(Policy), 부동산(Property), 그리고 상황 인식(Perception)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이다. 정책에 대한 낮은 신뢰는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는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시진핑의 경제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매우 이념적이다.

## 2. 미국의 상황: The US on the Critical Path

- 미국은 점점 외로워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해 온 규칙 기반 세계질서(rule-based world order)는 강성해진 중국, 러시아, 이란, 사우디 등 전체주의 세력의 확장 속에서 약화되고 있다. 일부 오랜 친구들(old time friends)은 미중러 간에서 실리적인 입장을 취하며 Fence Sitter(형세 관망자)가 되고 있다. 많은 동맹국들은 이념적 공유 관계 속에서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국익 계산을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바쁘다. 그들 스스로 생존을 위한 비용이 커지며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그들은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정치체제 유지를 위해 무제한으로 국익을 희생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다.
-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미국의 국내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달으며, 전략과 정책이 자주 반복되고 바뀌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자산은 줄어들고 있다. 이제 미국 혼자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

*시진핑의 꿈과 길은 어느 정도 수정을 요구 받을 것이며, 시진핑 스스로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임. 무엇보다 중요한 선택은 시장경제를 다루는 그의 태도가 매우 유연해져야 한다는 것임. 시진핑이 가고자 하는 꿈과 길이 있다 하더라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반복하며 시장과 친화해야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 것임.*

*미국은 점점 외로워지고 있음. 미국이 주도해 온 규칙 기반 세계질서(rule-based world order)는 강성해진 중국, 러시아, 이란, 사우디 등 전체주의 세력의 확장 속에서 약화되고 있다. 일부 오랜 친구들(old time friends)은 미중러 간에서 실리적인 입장을 취하며 Fence Sitter(형세 관망자)가 되고 있음. 많은 동맹국들은 이념적 공유 관계 속에서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국익 계산을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바쁨.*

으며, 그렇다고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 2기가 시작되면, 국제사회는 또 다시 신뢰위기에 빠지고 세계 리더십은 파편화(fragmentation) 속에서 표류하게 될 것이다.

■ 세계는 트럼프즘(Trumpism)의 부활이 가져올 파장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는 세계 리더십의 파편화 현상을 더욱 확대할 것이며, 그 결과는 세계질서의 무질서와 분쟁 및 전쟁의 확산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미국의 세계 리더십 약화 요인은 국력의 정체와 미국에 대한 신뢰상실이다. 포스트 냉전시대인 팩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시절, 미국은 세계 문제를 현실에 맞게 인식하지 못하고 세계를 품기보다 미국적 가치로 재단하려 했다. 그 결과는 국력과 신뢰자산의 낭비 속에서 전략실패와 동맹관계의 약화를 가져왔다. 군사력, 달러 파워, 첨단 기술력, 소프트 파워 등 미국의 방대한 국력은 지배적 힘(dominant power)의 수단으로서 점점 그 유용성과 비교우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자산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 이제 미국이 중심이 된 소다자주의를 활성화하고, 동맹국들과 신뢰자산을 더욱 확충하며, 미중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한 대화와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의 세계 리더십 약화 요인은 국력의 정체와 미국에 대한 신뢰상실임. 포스트 냉전시대인 팩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시절, 미국은 세계문제를 현실에 맞게 인식하지 못하고 세계를 품기보다 미국적 가치로 재단하려 했음. 그 결과는 국력과 신뢰자산의 낭비 속에서 전략 실패와 동맹관계의 약화를 가져왔음. 군사력, 달러 파워, 첨단 기술력, 소프트 파워 등 미국의 방대한 국력은 지배적 힘(dominant power)의 수단으로서 점점 그 유용성과 비교우위가 떨어지기 시작했음. 이 과정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자산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

#### 세계의 최대 소액주주인 미국 - The US, The Largest Minority Shareholder

■ 전술한 바와 같이 지금 세계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국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되는 일도 거의 없다. 미국은 세계의 지배적 국가로서의 힘을 잃고 있으며, 세계문제 해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미국은 최대주주이기는 하지만 소액주주로서 지도력이 약화되고 있다. 스스로 "The Largest Minority Shareholder(최대 소액주주)"라고 자평하기도 한다. 소액주주는 다른 주주들과 합쳐 50% 이상의 과점 주주가 되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대외 정책에서 동맹국들에게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들과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금세기 들어 미국은 자국 이익을 내세우다 동맹국들과 이해 충돌을 빚어왔으며, 신뢰자산을 상실한 측면이 있다.

■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 국력에 대한 과대평가 속에서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우리의 주권, 생존권, 그리고 정체성을 지키려 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국력의 기초인 군사력, 금융 전력과 달러 파워, 그리고 과학기술력과

소프트 파워가 세계 문제 해결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불을 끄기에 미국의 국력은 충분하지 않으며, 미국 국민들은 그 국력을 국내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더욱이 과도한 국가부채, 재정적자, 무역적자 등으로 인해 군사력의 유지 관리와 달러 파워 유지를 위한 통화발행에 근본적인 제약이 가해지며 미국의 국력은 약화되기 시작했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월가의 금융전력 약화와 함께 달러 파워는 기축 통화로서의 위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In God We Trust"를 믿는 국가의 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전략 중에는 여전히 힘으로 국제문제에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복잡성을 과도하게 단순화하고 갈등을 봉쇄하거나 디커플링으로 해결하려고 상호 의존성을 무시하며 봉쇄와 견제에 집중함으로써 오판과 전략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동맹국들에게 자국의 문제 해결 비용을 분담시키려 하다가 반발을 사기도 한다.
- 미중 두 강국은 매우 지쳐가고 있으며, 두 나라 모두 국내 정치와 경제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서로 현실적인 길을 선택하고 있다. 미중 간의 긴장관계는 오래 지속될 전망이다. 안보문제에 있어 긴장관계를 유지 하더라도 경제면에서는 협력적인 양상을 보일 것이다. 디커플링의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을 두 나라 모두 인식하고 있으며, 양측은 경쟁의 에스컬레이션에 제한해야 할 만큼 금융 및 무역 거래에서의 인센티브가 크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립과 충돌의 비용을 피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다. 미중 간의 전략대화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 11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열린 것이다.
- 앞으로 미중 간에 남아 있는 과제는 양국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제도는 규칙으로 자리잡아 상호 간의 기대 수준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키울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 이는 오해를 줄이고 에스컬레이션을 억제하며 무역 충돌 가능성을 낮출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공동정책 결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미중 사이에는 금융안정성이라는 공동정책 목표가 있으며, 핵확산 및 테러리즘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양국관계의 제도화와 상호 전략적 신뢰가 강화 될 것이다.
- 2015년 이후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은 충돌적이고 전방위적인 양상을 보이며 장기전으로 격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지치고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전략 중에는 여전히 힘으로 국제문제에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복잡성을 과도하게 단순화하고 갈등을 봉쇄하거나 디커플링으로 해결하려고 상호 의존성을 무시하며 봉쇄와 견제에 집중함으로써 오판과 전략실패를 반복하고 있음. 특히 동맹국들에게 자국의 문제 해결 비용을 분담시키려 하다가 반발을 사기도 함.*

*앞으로 미중 간에 남아 있는 과제는 양국관계를 제도화 하는 것임. 제도는 규칙으로 자리잡아 상호 간의 기대 수준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키울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함. 이는 오해를 줄이고 에스컬레이션을 억제하며 무역충돌 가능성을 낮출 것임. 그 다음 단계는 공동 정책 결정을 추진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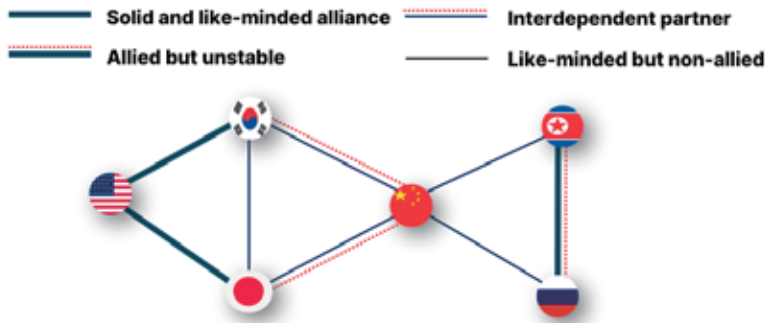
있으며, 두 나라 모두 국내 정치 및 경제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대외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세계질서가 무질서의 양상을 띠고, 미국과 중국 모두 이를 제어할 위치에서 벗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중견국가의 위치가 부상하게 된 것이 또 하나의 환경변화다. 미중관계의 종속 변수화 되었던 한중관계도 이제는 한중일과 한미중의 3각구도를 전제로 관계 방정식을 논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 세계 1위 미국과 2위 중국 모두에게 10위 한국은 매우 의미있는 존재가 되었으며, 두 나라 어느 쪽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중국은 한국이 미중 사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기를 원하지만, 한미일 공조체제가 확고해 질수록 한국이 미국에 완전히 밀착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회유하고 견인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면 미국과의 신뢰는 금이 가고, 중국은 한국을 경시할 것이다. 이렇게 한미중 3각관계는 복잡미묘해지고 있으며, 상호 충돌적 요소도 크게 존재하지만, 이 모든 부정적 요소를 제어할 만큼의 상호의존성도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존재는 한국에 무엇일까? 미국과는 "Sailing in the same boat, with shared dream, trust assets, and complementarity in science and technology"이라고 말할 수 있다.

### III. 동북아시아의 지정학, 지경학의 함수

- 지금 동북아시아에는 3+1개의 3각 Minilateral 협력 구도와 갈등 구도가 얽혀 있다. 이는 각국이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교집합(convergence) 관계와 차집합(divergence) 관계를 주고받는 상황이다. 각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개의 소다자기구 내에서 협력, 합종, 연합 또는 각축을 하고 있다.

[그림 1] 동북아시아의 지정학, 지 경학의 함수



출처: 정덕구 작성(2024. 09)

지금 동북아시아에는 3+1  
개의 3각 Minilateral 협력  
구도와 갈등 구도가 얽혀  
있음. 이는 각국이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교집합  
(convergence) 관계와  
차집합(divergence) 관계  
를 주고받는 상황임. 각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달성  
하기 위해 여러 개의 소다  
자기구 내에서 협력, 합종,  
연합 또는 각축을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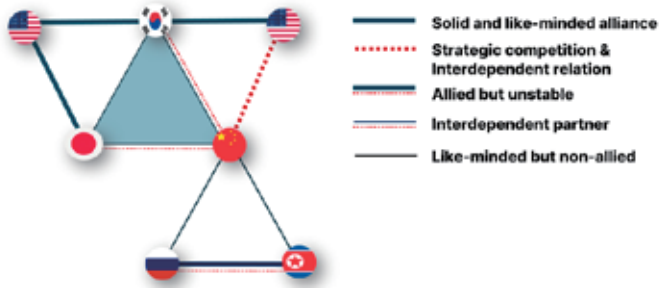
- 첫째는 한미일 관계이다. 이 삼각관계는 미국, 한국, 일본 사이의 안보공조 체제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기초로 하여 한일관계가 이 속에 포용되어 있다. 2023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의에서 비교적 강고한 협력체를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 둘째는 북중러 협력 구도이다. 6.25 한국전쟁을 발발시킨 동맹국이었던 북한, 중국, 러시아는 냉전시대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중국이 대륙 세력에서 해양세력으로 부상하려는 야심을 보이고, 러시아가 구소련 해체 이후 친서방으로 접근하면서 세 나라는 각자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후 중국의 국력이 팽창하는 가운데 미중 경쟁관계가 충돌 단계에 이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제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동맹을 맺어 3각협력 구도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북중러 3각구도에서는 미중관계가 대립, 충돌 국면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대화와 경쟁관계로 갈 것인지에 따라 중국의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태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3각구도는 내적 변화도 예상되며, 현재 북중관계의 악화 등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하고 가변적인 상황이다.
- 셋째는 오늘의 주제인 한중일 관계이다.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서,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는 위기수습의 후속조치로 ASEAN + 한중일 협력 구도를 창설했다. 동북아시아 정세가 미중 간 갈등 국면에 휘말리자, 이 협력 구도 또한 심각한 혼돈에 빠졌다. 한중일 세 나라는 상호의존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서로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3국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그 사무국을 서울에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셋째는 오늘의 주제인 한중일 관계임.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서,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는 위기수습의 후속 조치로 ASEAN + 한중일 협력 구도를 창설했음. 동북아시아 정세가 미중 간 갈등 국면에 휘말리자, 이 협력 구도 또한 심각한 혼돈에 빠졌음. 한중일 세 나라는 상호의존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서로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3국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그 사무국을 서울에 두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나라는 여전히 동상이몽과 오월동주의 상황 속에서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계산을 두드리는데 몰두하고 있음.

그림에서 보듯이 한중일 3국 간의 관계는 매우 불안정함. 안보 면에서 한중, 중일 관계는 서로를 가상의 적으로 바라보며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음. 반면 경제관계에서는 상호 의존성과 보완적 산업 관계가 깊음.

나라는 여전히 동상이몽과 오월동주의 상황 속에서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계산을 두드리는 데 몰두하고 있다.

[그림 2] 3+1개의 삼각 Mini-lateral 관계도



출처: 정덕구 작성(2024.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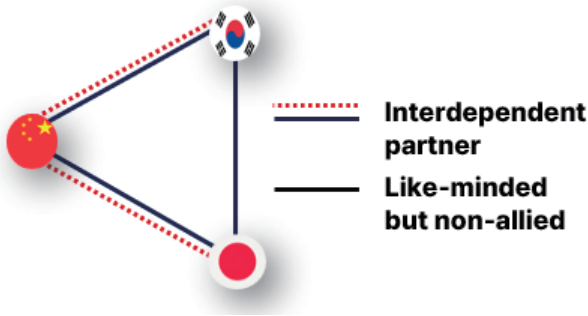
-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3각구도는 한미중 관계로, 한국이 처한 딜레마적 상황을 대변한다. 세 나라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이해관계를 논의한 적은 없지만,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에서도 미중의 이해관계 변화에 따라 출렁이는 상황이다.
- 이렇게 21세기에 이르러 동북아시아는 각국의 이해가 충돌하면서도 상호 의존하는 가운데 격류를 거슬러 오르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개의 3각 역학 구도는 ① 세계 질서의 기본 구도와 ② 미중 패권 구도의 향방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이제 이러한 핵심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해 본다.

#### IV. 한중일 3국 관계의 매트릭스: 교집합과 차집합

- 오늘의 본론인 한중일 관계를 깊이 살펴보겠다. 그림에서 보듯이 한중일 3국 간의 관계는 매우 불안정하다. 안보 면에서 한중, 중일 관계는 서로를 가상의 적으로 바라보며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 반면 경제관계에서는 상호 의존성과 보완적 산업 관계가 깊다.
- 한국을 중국과 일본의 국력으로 비교할 때, 3각형 자체가 그려지지 않을 때도 있었다. 현재 GDP 규모를 살펴보면, 18조 달러의 중국과 5조 달러 수준의 일본에 비해 한국은 1.8조 달러이다. 경제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오랫동안 마음 한 켠에 한국을 속국으로 생각해왔고, 일본은

근대 초기 36년간 한국을 식민 통치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중일 3각 협력 구도의 유효성이 보장되려면 중국과 일본 두 나라가 한국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현재 수준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

[그림 3] 한-일-중 3국 관계의 불안정성



출처: 정덕구 작성(2024. 09)

- 선진국 일본을 한국이 가장 먼저 추격하고, 일부는 추월하고 있는 한편, 중국은 한국을 추격하고 추월해왔다. 이 과정에서 3국 경제는 고도의 상호 의존성이라는 줄에 얽혀 있는 상황이다. 동북아시아의 중심 세력인 한중일 3국관계는 누구도 서로 완전한 적국이 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갈등구조 속에 높은 상호의존성이라는 사슬에 묶여 있다. 일본은 미국과 한국의 도움 없이는 중국을 제어할 수 없으며, 한미일 준동맹적 안보 공조 체제 하에서 중국의 서태평양 제해권 장악은 불가능하다. 한국은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 하기 위해 중국의 직간접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중국을 장기적인 안보상 가상의 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과의 연합은 불가피하다.
- 더욱이 미국은 서태평양 제해권 확보를 위한 중국의 남하정책을 막고, 남중국해, 대만해협, 북한핵 문제를 적정 관리하는 데 혼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중 간 안보상의 대립이 가장 첨예한 지역은 서해의 해상권 문제이다. 현재 서해의 배타적경제수역 (EEZ)이나 이어도 EEZ 관할권 문제가 중국의 반론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특히 대만사태와 관련하여 서해는 충돌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만으로는 중국을 제어할 수 없었고, 인도-태평양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해결되지 않는 기하학의 보조선과 같은 존재로 평가될 수 있다.
-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잠재된 의심 속에 심각한 신뢰위기에 빠져 있다.

한국의 국론이 양분되어 있고, 문재인 정권 당시의 상황이 트라우마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이 미중 사이의 중간지점에 서기를 내심 바라지만, 실제로 그럴 경우 중국은 한국을 자국 외교에 경사되도록 교묘한 외교전술을 구사할 것이므로 한국의 오판이 우려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이러한 한미일 3국 간의 신뢰부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운명적으로 중국과 완전히 단절할 수 없으며, 미국에 밀착하지 않으면 중국의 농간과 압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것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겪어야 하는 운명적 딜레마이다.

*18조 달러의 GDP를 가진 중국에 비해 1.8조 달러 GDP의 한국은 국력의 비대칭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음. 한국은 한미일 30조 달러의 GDP를 바탕으로 그 속에서 중국을 바라보려 함. 그러나 미국과 일본도 한국에 영원한 동지가 될 수는 없음. 그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자주 압박할 것임. 한국은 국력의 규모나 인구 등에서 그들을 제어할 수 없음. 따라서 그들이 하지 못하는 곳에 역량을 집중하고, 틈새 시장과 원천기술,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필수국가로 자리 잡아야 함. 이것이 한국형 자강론임.*

■ 18조 달러의 GDP를 가진 중국에 비해 1.8조 달러 GDP의 한국은 국력의 비대칭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국은 한미일 30조 달러의 GDP를 바탕으로 그 속에서 중국을 바라보려 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도 한국에 영원한 동지가 될 수는 없다. 그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자주 압박할 것이다. 한국은 국력의 규모나 인구 등에서 그들을 제어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이 하지 못하는 곳에 역량을 집중하고, 틈새시장과 원천기술,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필수국가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것이 한국형 자강론이다.

### 1.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와 공통 위험 요인

■ 돌이켜보면,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동북아시아의 핵심국가로서 지난 40여년간 협력을 통한 번영의 길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현재 이들 국가는 세계경제의 3대 기둥으로 확실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3국간에는 보완적 생존관계와 보완적 산업관계가 형성되어 공존의 터전을 마련해왔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서구 경제가 점점 위축되는 가운데 동아시아 경제, 특히 동북아시아 경제는 세계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그 기초 조건을 제공한 것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이며, 정치와 경제의 분리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는 흔들리며 신음하는 가운데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세 나라는 모두 심각한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성장엔진인 중국경제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의 정책당국은 경제구조 조정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각국의 국내사정과 정치상황도 3국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저지하고 있다. 3국간 경제협력 구도도 팬데믹 이전만큼 원활하지 않다. 경제와 안보의 통합화 현상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한다. 더욱이 금년에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선거 양상은 세계 경제에 큰 리스크 요인이 될 것이다. 결국 전 세계는 자유무역 시대에서 산업정책

중시의 시대로 전환하며, 보완적 산업관계는 약화되고 반목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빠져들고 있다.

- 이러한 경제위축 과정에서 경제 외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제 3국 모두 경제회생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3국 간에는 공동의 고민거리도 있다. 이들 국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며, 인구감소의 여파가 큰 세 나라이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3년 동안 수많은 3국 국민이 사망하고 고통을 받았다. 이제 이러한 질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교류협력도 크게 요구됨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 오래전부터 급격한 기후변화 속에 지구는 죽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지구인 호모 사피엔스의 종말론적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금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집단자살 중이라는 경고에 정치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모두 소극적인 세계정치가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도 3국의 공동 과제이다. 3국의 생존환경이 축소불균형 상태로 수축되고 있어 미래가 두려운 상황이다. 그리하여 3국 간에는 공동의 정책 수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공동의 대응책이 필요하다. 특별히 지난 5월 27일에 개최된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은 이러한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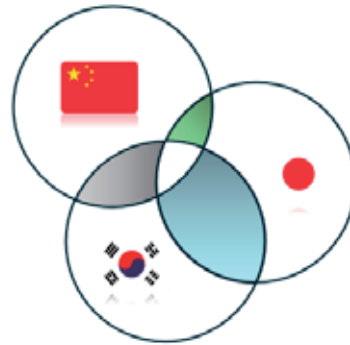
## 2. 3자 관계의 복잡성, 충돌성 그리고 상호의존성

- 큰 틀에서 조합해보면 현재의 한중일 3국관계는 복잡성(Complexity), 갈등(Conflicts), 그리고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의 3각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고, 국내 사정도 많이 다르며, 경제발전 단계도 상이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3국간의 관계 방정식을 큰 틀에서 조망해보면 '복잡성'이라는 단어로 압축될 수 있으며, 상호간 국가이익에는 갈등도 많다. 그러나 한중일 3국간에는 이미 언급한 복잡성과 갈등을 모두 합한 것보다 훨씬 큰 상호의존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3국관계의 미래를 밝게 하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경제위축 과정에서 경제 외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음. 이제 3국 모두 경제회생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임. 아울러 3국 간에는 공동의 고민거리도 있음. 이들 국가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며, 인구감소의 여파가 큰 세 나라임.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3년 동안 수많은 3국 국민이 사망하고 고통을 받았음. 이제 이러한 질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교류협력도 크게 요구됨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음.*

큰 틀에서 조합해보면 현재의 한중일 3국관계는 복잡성(Complexity), 갈등(Conflicts), 그리고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의 3각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함.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고, 국내 사정도 많이 다르며, 경제발전 단계도 상이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3국간의 관계 방정식을 큰 틀에서 조망해보면 '복잡성'이라는 단어로 압축될 수 있으며, 상호간 국가 이익에는 갈등도 많음. 그러나 한중일 3국간에는 이미 언급한 복잡성과 갈등을 모두 합한 것보다 훨씬 큰 상호의존성이 존재하고 있음.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3국관계의 미래를 밝게 하는 요소가 됨.

[그림 4] 한중일 3국 관계의 매트릭스-교집합과 차집합



■ 동북아 지역에 얽혀 있는 지정학, 지경학, 지기술학을 상호의존성이라는 틀로 엮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하지만 이 상호의존성의 장점을 계속 살려 나가야 하며, 그것을 무기로 삼아 특정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위협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한중일 3국은 "Trust Asset, Interdependence, and Complementarity"를 기치로 삼아 상호 교류,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서로 다른 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한중일 3국이 공존의 생존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공동의 목표를 합의하고 추구해야 할 시점에 있다.

### 3. 한중일 3각관계 속에 내포 된 Demand Structure

■ 이러한 양자관계의 합이 3국관계의 총합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3국관계는 매트릭스 관계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6개의 복합관계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3국 간의 상호 관계를 요구(Demand)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미일 3국이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

	한국	중국	일본
한국		(1)	(4)
중국	(2)		(5)
일본	(3)	(6)	

(1)한국이 중국에게 요구하는 것	(2)중국이 한국에게 요구하는 것
<p>[가치적 차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범, 제도 등 보편적 가치에 존중</li> <li>· 상호주의 원칙 준수</li> <li>· 한중관계의 한미관계 종속변수화 반대</li> </ul> <p>[지정학적·안보적 차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및 협조</li> <li>· 미중 전략경쟁으로 북한의 핵증강에 대한 중국의 제재 동참 저하.</li> <li>· 안보 리스크 증가 속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 필요</li> <li>·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한 탈정치화와 탈안보화</li> <li>·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적 해결 희망</li> </ul> <p>[경제적 차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보복 자제, 정경분리 원칙 준수</li> <li>·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점진적 축소</li> <li>·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및 기술협력 제한 압박에 적절한 호응 필요</li> <li>· 경쟁성 확대 속 경제교류 지속 필요</li> </ul> <p>[미래적 차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신흥 이슈 분야 공동이익</li> <li>· 지역 이슈(환경, 보건) 등 협력 여지 확장</li> <li>· 중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다자지역질서를 위한 외교적 대화 기대</li> </ul>	<p>[안보적 차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에 참여 자제</li> <li>· 한국의 반중노선 최소화</li> <li>· 대미 경사 저지</li> <li>· 한미일 3각공조 강화시 극단적 반중 행위 경계</li> <li>· 북한의 안보 우려 중시 요구</li> <li>· 하나의 중국 원칙 등 중국의 핵심이익 존중</li> <li>· 사드(THAAD)의 추가 배치 반대</li> </ul> <p>[경제적 차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중 FTA 협상 재개</li> <li>· 한중 간 경제협력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반도체, 중간재 협력</li> <li>· 경제안보 분야 긴밀한 협력 필요</li> <li>· 중국식 발전모델 강조</li> </ul> <p>[미래적 차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국가위협 및 신흥안보 이슈에서 협력 유지</li> <li>· 문화적 차원에서 한국과 협력을 유지</li> <li>· 한국의 반중 감정을 완화할 필요</li> </ul>

(3)일본이 한국에게 요구하는 것	(4)한국이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
<p><b>[안보적 차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활동 동향 관련 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li> <li>· 정기 군사 훈련 및 연합 훈련을 통해 북한 및 타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li> </ul> <p><b>[경제적 차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등 무역협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 무역장벽을 낮출 것을 요구</li> <li>· 기술 및 산업 협력 증진(반도체, 배터리, 첨단 제조업 등 전략 산업에서 협력 강화, 상호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li> </ul> <p><b>[역사적 차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 더 열린 마음과 수용적 태도로 접근하기를 요구</li> <li>· 역사적 갈등에 대한 양국 간의 합의된 이해를 위한 대화와 협력을 촉구</li> </ul> <p><b>[미래적 차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과의 인적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양국 국민 이동성 향상</li> <li>· 아세안 지역의 안정 및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 등을 위한 다자간 협력에 적극 참여</li> <li>· 지역 내 안보 이슈에 대한 공동의 입장 정립. (예, 중국의 군사활동 증가와 같은 지역 내 위협에 대해 한국과의 공동 대응을 위해 협의할 것을 요구)</li> </ul>	<p><b>[역사적 차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진실된 사과와 적절한 보상</li> <li>· 교과서 등에서의 왜곡 방지,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고 교육</li> </ul> <p><b>[경제적 차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 양국 간 자유무역 활성화</li> <li>· 특히 반도체 및 첨단 산업 소재에 대한 규제 해소</li> <li>·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 강화와 상호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 도모</li> </ul> <p><b>[안보적 차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 및 안보 협력의 강화</li> <li>· 한-미-일 간 삼각안보체계 강화, 공동 훈련 및 정보 공유에 적극 참여</li> </ul> <p><b>[미래적 차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G7+ 가입에 협조</li> <li>· 양국 간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민들 간의 이해와 우호 관계를 증진</li> <li>· 학생, 관광객, 비즈니스 방문자에 대한 비자정책 완화 및 교류 활성화</li> <li>·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li> <li>·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li> </ul>

(5)중국이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	(6)일본이 중국에게 요구하는 것
<p><b>[안보적 차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어도 영유권 문제에 미국 개입 반대</li> <li>· 중일관계 개선을 통해 일본의 지나친 미국 의존 내지 밀착을 완화</li> <li>· 한미일 안보공조체제가 북핵 억제력의 강화를 넘어 중국에 대한 견제와 대립적 전략으로 확장되지 않기를 희망</li> <li>· 이를 위해 북핵 문제를 한국, 일본을 견인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동</li> </ul> <p><b>[경제적 차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중 FTA 협상 재개</li> <li>· 한일중 협력 기반 확충을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li> </ul> <p><b>[미래적 차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일 공조체제가 일본의 대중국 적대 정책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최대한 일본 견인</li> <li>· 한중일 관계에 상호 포용성을 강조</li> </ul>	<p><b>[안보적 차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태평양 자유항로에 대한 중국의 도전에 깊은 우려 표명</li> <li>· 북중러 3각 협력 구도에 중추적 역할을 하지 말고 한중일 역내 파트너십 형성 노력</li> <li>· 북핵 문제에 중국이 최대한 억제력을 행사하고 유엔의 대북제재결의를 확실히 지키며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에 Veto권을 행사하지 말 것</li> <li>· 중국의 군사활동, 특히 해양에서의 군사적 확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변국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신뢰 구축 조치</li> <li>·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같은 영토분쟁에 대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책 마련</li> </ul> <p><b>[경제적 차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정경분리 원칙을 강하게 희망</li> <li>· 희토류 등 희귀물질 수출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반대</li> <li>· 한중일 역내국가 간 무역보복 금지</li> </ul>

#### 4. 양자 관계의 관리

- 이러한 3국간 매트릭스에서 발견된 갈등, 충돌, 상호의존성을 염두에 두면서 각국은 양자관계를 원만하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

##### 한일관계

- 한일관계는 매우 애매한 관계다. 일본은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랫동안 거시경제 정책의 각종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창조적 혁신이 지체되면서 제조업 생태계가 어느 한쪽으로 쏠려 산업 구조상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국가 부채는 GDP의 3배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1인당 GDP에서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으며, 국제신용평가에서도 한국의 AA-보다 2단계 낮은 A-를 기록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한국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채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분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한국내 국론분열의 원천이 되고 있지만, 한국이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전환할수록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윤리적 열위에 빠지고, 국력은 오랫동안 정체되며 축소 불균형 국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국은 북중러 결속 문제를 주의 깊게 살피며 한일관계의 원활한 회복을 압박하고 있고, 한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과거사 문제로 답보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가 윤석열 정부 들어 숨통이 트이게 되었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선언을 이끌어냈으나, 미국의 국내정치와 한국의 진영 간 대립으로 인해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

- 과연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 없는 캠프 데이비드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한미일 안보공조체제는 깨지기 어려울 것이지만 더 확장시키기 어렵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출범에 즈음하여 이 체제에 심각한 변화가 예상된다. 한미일 안보공조체제도 트럼프 2기 정부에 이르면 엄청난 형질 변경 압박에 직면할 것이며, 이 경우 북중러 3각구도와 한중일 3각구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처럼 도처에 존재하는 감성과 역사관의 차이로 한일관계의 선(線)은 매우 불안정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가치적으로 한 배를 타고 있는 상황이다. "Sailing in the Same Boat with a Shared Dream"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산업의 보완성과 경쟁성을 함께 갖고 있다. 즉, "With industrial complementarity"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배 위에서 계산을 두드리기에 바쁘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서로 믿지 못하는 신뢰의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를 'With No Trust Asset'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시기심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의 G7+ 가입이나 국제통상기구 등에 대한 한국의 진입을 사실상 막고 있다.
- 한일관계는 상호 존중과 역지사지의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의 치명적 결점은 잔 계산에 강하고 과거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반성하지 않으며 이를 지키고 계승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과거 역사적 사실에 많이 매여 있으며, 일본이 독일과 같은 전후 처신으로 당연한 외교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인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미래지향적 자세는 좋은 선택이지만, 일본은 내심 이를 미국의 압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동으로 여기며 일본 외교의 승리로 계산하기도 한다. 일본이 한국의 G7+와 CPTPP 가입을 환영

*한일관계는 상호 존중과 역지사지의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의 치명적 결점은 잔 계산에 강하고 과거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반성하지 않으며 이를 지키고 계승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과거 역사적 사실에 많이 매여 있으며, 일본이 독일과 같은 전후 처신으로 당연한 외교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인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

할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일본은 계산과 계산을 반복할 것이다. 한국의 OECD 가입 때도 일본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고, 이는 외교적 무관심과 회피의 사례로 남아 있다. 그 당시 멕시코는 미국이 스폰서 국가(sponsor country)였고, 일본은 한국이 유럽국가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가입신청시부터 논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멕시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가입시켜주었다.

■ 1997년 동아시아 위기 때, 한국정부가 사카키바라 전 일본 대장성 차관에게 위기극복을 위한 협조를 구체적으로 요구했지만, 얼마 후에 우리가 받은 답변은 아이러니하게도 Larry Summers 미 재무부 부장관의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한국이 위기 해결을 위한 도움을 청했을 때 일본은 미국의 말을 빌려 우회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했고, 이는 세계 강국 일본으로서 어처구니없는 외교적 태도라고 생각했다.

■ 하지만 일본이 이런 외교적 태도를 지녔다고 해서 우리가 답을 쌓고 지낸다면, 동북아시아의 격류에 휩쓸리게 되고 결국 한국만 손해를 볼 것이다. 일본은 미국에 밀착하며 유럽, 인도, 동남아시아에 막대한 외교적 기반을 쌓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외교 현안에 관해서 일본에 너무 일방적으로 양보만 한다면, 일본은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 “미래지향적 자세(Forward looking stance)와 신중한 접근(With careful steps)”이 한국의 대일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한국이 앞으로 밀착해야 할 나라는 미국이다. 한국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5%에서 19%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10년 내에 13~15%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현상이다. 반면,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13%에서 18%까지 상승했다. “산업적, 과학적, 기술적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 in Industry, Science, and Technology)”은 바로 최선의 전략이며 한국의 미래 비전을 확장할 것이다. 이때 일본은 한국에 강력한 경쟁자로 부각될 것이다. 한국의 강점은 “첨단산업에서의 대량생산 능력(Mass production capability in high-tech industry)”이며, 일본은 미국의 과학기술 수준에 한국보다 한두 발짝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 한국이 주권, 생존권, 그리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 일본, 미국 중 어느 국가도 한국 없이 생존하기 어려운 필수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이 모든 나라들에게 필수적인 국가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재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미래지향적 자세  
(Forward looking  
stance)와 신중한 접근  
(With careful steps)”이  
한국의 대일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함.*

*한국이 주권, 생존권, 그리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 일본, 미국 중 어느  
국가도 한국 없이 생존하기  
어려운 필수기술을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이 모든 나라들에게  
필수적인 국가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재 양성에 집중  
해야 함. 이는 매우 절실한  
과제임.*

한중관계에는 3개의 거리 관계가 존재함. 첫번째는 가치와 정체성의 거리임. 둘째는 기술력의 거리임 셋째는 미중관계와 한중관계의 이중거리임.

불가피하게 이제부터 한중 간에는 정치적 영향 없이 대등한 거래 관계(Arm's length)가 형성되어야 함. 상호 이익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래적 질서가 중심이 되는 공존의 길을 확립해야 함.

## 한중 관계

### ◆ 한중 간 세계의 거리를 잘 관리해야

- 한중관계에는 3개의 거리 관계가 존재한다. 첫번째는 가치와 정체성의 거리이다. 두 나라 사이에 가치와 정체성의 거리가 멀어지면 아무리 경제적 유대가 깊어도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며 국가의 생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없다.
- 둘째는 기술력의 거리이다. 이것은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국가이익 균형에 관한 거리이다. 부가가치 사슬구조 내부에서 한중 간에는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놓고 극심한 경쟁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한중 간의 기술 거리가 좁혀지거나 역전되면 중국은 상대적 우월감 속에서 한국을 무시하거나 경제 이외의 부문에서 한국을 압박할 위치를 선점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 반도체 이외에도 첨단(cutting edge) 핵심기술과 틈새 원천기술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중관계에 평화가 올 수 있다.
- 셋째는 미중관계와 한중관계의 이중거리이다. 미중관계가 극단적인 경쟁 관계 또는 충돌 상황에 처해 있는 오늘날, 한미중 관계의 거리는 한중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한국이 미중 사이의 중간 지대의 어느 곳에 위치하기를 원하며, 미국 쪽에 밀착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미중관계가 험악해지고 서로 대치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한중관계 역시 편치 않다. 그리고 한미관계가 깊어질수록 중국은 한국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고,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놓으려 회유와 압박을 일삼게 될 것이다. 한미관계가 멀어지면 중국과 한국은 더욱 친밀해지지만, 과거 속국론이 되살아나며 무례를 일삼고 한국의 국정에 간여하려 할 것이다.
- 불가피하게 이제부터 한중 간에는 정치적 영향 없이 대등한 거래 관계(Arm's length)가 형성되어야 한다. 상호 이익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래적 질서가 중심이 되는 공존의 길을 확립해야 한다. 앞으로 생존전략의 중점은 한미 두 나라가 한미동맹을 산업 기술 동맹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한국의 기술 능력, 생산성 높은 제조 생태계, 대량 생산 능력은 한 단계 더 진화하였으며, 이는 한국이 미국과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 ◆ 시진핑과 중국은 차별화해야

- 시진핑 시대를 넘어선 중국의 모습을 그려보자. 미국 등 서방 세계는 덩

샤오핑 시대의 중국에 익숙해왔고, 시진핑 시대의 중국에 대하여는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시진핑 시대가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는 시진핑 자신도 잘 모르는 일이다. 어쨌든 시진핑 시대는 결국 끝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사고를 가진 국가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그가 누구이든 당시 중국인민들의 욕구 체계에 맞는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2030년경 중국은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 육박할 것이며, 현재와 같은 사회 통제와 고립 외교를 그대로 이어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금 중국을 바라볼 때 시진핑과 중국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지배 구조는 지금보다 훨씬 유연하고 연성적인 형태로 변화할 것이며, 서방세계와의 관계도 협력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는 시진핑 이후 세대의 중국을 바라보며 공존의 생존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 **한중 간의 Redline 필요성**

■ 중국과는 동맹이나 연합의 관계로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가상의 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외교관계는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되고 있으며, 서로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화 채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으로서는 상호이익과 상호의존의 복잡성 속에서 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우선 한국은 중국에 다음의 여섯 가지 기본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 ①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을 종속국으로 보지 말고, 사드 배치 때처럼 경제적 강압을 가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중국은 한국을 중국에 더 가깝게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한국은 한-미동맹의 본질에 어긋나는 중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한다. 이것이 한국의 대중국 정책의 기본원칙이 될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중국은 양국 간 레드라인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 ③ 만약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묵인하거나 협력한다면 한국은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다. 중국은 등거리 정책을 취해야 한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 ④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의존과 심화된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정치적 압력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정.경분리라는 옛 약속을 지켜야 한다. 더욱이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춰 미국과의 경제적, 산업적 보완성을 추구할 것이다.
- ⑤ 한국은 우리의 주권과 생존, 정체성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며,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는 중국의 모든 정책에 강력히 반대할 것이다.

*중국과는 동맹이나 연합의 관계로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가상의 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러나 외교관계는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되고 있으며, 서로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화 채널이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과 중국으로서는 상호 이익과 상호의존의 복잡성 속에서 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됨.*

⑥ 한국과 중국은 양국 간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는 특별한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이와 함께 한중관계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몇 가지 핵심 국익에 대하여 가드레일이 필요하고 분명한 선(redline)을 범하지 않은 것이 현명한 처신이다.

[표 2] 한국과 중국 간 서로 넘지 말아야 할 가상의 레드라인

중국이 넘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 마지노선	한국이 넘지 말아야 할 대중국 마지노선
중국과 한중 EEZ협정 조기 체결, 한국의 EEZ내에서의 군사 활동	중국의 핵심이익(대만, 인권 등) 전면 부정
북한의 대남 위협과 공격행위 동조, 우리의 KADIZ 무단 침입 및 무력화	노골적인 대중국 군사적 포위망 참여 및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
우리 영해에서의 불법조업	대중국 공격형 무기 배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 수역에서의 항행 자유 불허	한미동맹의 전략적 유연성 전략 참여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유사시 군사적 개입
한국의 안보 주권에 대한 개입	한미동맹의 방위 대상에 중국 추가
한국의 정체성 왜곡 언행	북한 비핵화 수단으로 선제공격 동원
한국의 가치와 이념에 반하는 행위	한미일 군사 동맹 추진

출처: 정덕구 외 지음, 극중지계 1 - 정치·외교·안보 편, p358 (2021)

■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무덤덤한 간접 지원을 해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안에 대해 veto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군사적으로는 가상의 적이지만, 한중간의 경제관계는 보완적 생존관계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시진핑 이후의 중국을 바라보며 과학기술과 산업분야의 격차를 얼마나 벌려놓을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결국 장기적으로 한중간에는 공생적 협력관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진핑 시대의 불편한 관계가 시진핑 이후 세대에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주목하며, 장기적으로 한·중 공존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기초 조건이 무엇인지 심층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일중 관계**

- 일중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먼저 미중관계를 탐색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일본의 국력은 중국의 국력과 비교할 때 큰 비대칭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과의 단독 협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부족한 힘을 보완하려 하고, 결국 미국에 밀착하여 생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중 간에는 불가피하게 갈등, 협력, 견제의 상황이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일중관계도 이러한 미중 관계의 갈등, 협력, 견제에 깊이 연관될 수밖에 없다.
- 일본은 자국이 제안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FOIP)이라는 틀의 유효성을 중시하며, 미국과 중국이 함께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앞으로 일본이 자국이 제안한 TPP에 얼마나 많은 주요 국가들을 참여시킬 수 있을지가 치열한 외교 과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국력이 독일, 영국, 프랑스 등과 동급의 나라인,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가로 내려앉고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외교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 특히 한중일 3각관계에 있어서 일본은 과거사에 정신적, 도덕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일본외교의 족쇄로 남아서는 안 된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중국인민이 겪었던 잔인한 일본군의 만행과 일본군이 중국 해안지역 대부분을 장악하면서 중국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수모를 잊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현실주의적인 시각으로 일본을 바라본다. 앞으로 서태평양 자유 항로를 두고 미일 연합함대와 대치할 현실적인 문제는 매우 치명적인 도전이 될 것이다.

**5. 소결**

- 작금의 세계질서나 동아시아 안보상황은 매우 무질서하고 문제해결 능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국가간의 신뢰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우선, 미중관계의 안전한 운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미중 어느 쪽도 혼자서 전쟁과 분쟁을 막을 수 없을 만큼 지도력이 약화되어 있다. 미국은 북핵 문제와 중국의 팽창정책을 억제하기 위하여 한미일 공조체제를 발족시켰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푸틴과 정권 유지가 어려워진 북한의 김정은은 상호 필요에 의해 자동개입을 전제로 하는 군사동맹까지 맺게 되었다.

*일본은 자국이 제안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FOIP)이라는 틀의 유효성을 중시하며, 미국과 중국이 함께 참여하기를 희망함. 앞으로 일본이 자국이 제안한 TPP에 얼마나 많은 주요 국가들을 참여시킬 수 있을지가 치열한 외교 과제가 될 것임.*

*특히 한중일 3각관계에 있어서 일본은 과거사에 정신적, 도덕적 결함을 지니고 있음. 이것이 일본 외교의 족쇄로 남아서는 안 됨. 중국은 일본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음. 중일전쟁 발발 이후 중국인민이 겪었던 잔인한 일본군의 만행과 일본군이 중국 해안지역 대부분을 장악하면서 중국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수모를 잊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중국은 현실주의적인 시각으로 일본을 바라봄. 앞으로 서태평양 자유 항로를 두고 미일 연합함대와 대치할 현실적인 문제는 매우 치명적인 도전이 될 것임.*

*한미일, 북중러 3각협력 구도가 모두 불안정할 때일 수록 한중일 3국간의 경제적 유대와 상호 의존성에 기반한 적극적인 소통과 넓은 이해가 필요함. 한중일 3국 관계를 매트릭스로 분석해 보면 세 나라 사이에는 복잡성(Complexity), 갈등(Conflict), 그리고 상호 의존성(Interdependence)의 요소가 짙게 드리워져 있음. 따라서 한중일 삼국관계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보완적 생존관계와 보완적 산업관계를 긴밀히 하여 관계의 복잡성을 단순화하고 갈등과 충돌 요소를 완화해 나가야 함.*

*우리는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움트는 전쟁과 분쟁의 기운을 진정시키고,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협력과 경쟁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함. 이 과정에서 한국 외교 안보 전략의 핵심은 동북아 지역에 강한 전쟁 역지력을 확보하는 것임.*

■ 이러한 북러관계의 결속은 북중관계에 부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따라서 북중러 결속을 전제로 한 신냉전으로의 진전을 불가능하게 보이게 한다. 그러나 미중관계가 악화되고 중국이 고립되면 북중러 연합의 가시화도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유민주 진영의 한미일 공조체제와 공산 진영의 북중러 협력구도가 대치하는 상황을 막고,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소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중관계를 안정시켜 중국을 러시아와 북한 등 불량국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를 구체화할 소다자 기구는 한중일 협력 구도이며, 한일 양국은 중국을 이 프레임에 호혜적으로 끌어넣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한미일, 북중러 3각협력 구도가 모두 불안정할 때일수록 한중일 3국간의 경제적 유대와 상호 의존성에 기반한 적극적인 소통과 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한중일 3국 관계를 매트릭스로 분석해 보면 세 나라 사이에는 복잡성(Complexity), 갈등(Conflict), 그리고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의 요소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따라서 한중일 삼국관계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보완적 생존관계와 보완적 산업관계를 긴밀히 하여 관계의 복잡성을 단순화하고 갈등과 충돌 요소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

## V. 한국 외교의 길: 자강, 동맹, 연합, 소다자관계의 관리

■ 오랫동안 한국외교안보 전략의 시계(視界)는 한반도 문제와 북한핵 문제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선진 중견국가로서 시야를 세계 외교안보 역학 관계에 대한 큰 그림으로 확장하여, 인도태평양을 넘어 글로벌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외교안보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적절한 비용 부담도 기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전략적 시각 아래 우리의 주권, 생존권, 그리고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앞으로 한중일 3각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을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 우리는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움트는 전쟁과 분쟁의 기운을 진정시키고,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협력과 경쟁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은 동북아 지역에 강한 전쟁 역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정신을 계승 발전 시키며 중국과는 장기 공존의 질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한일 간에는 쉽게 봉합될 수 없는 감정적 응어리가 남아 있으며, 한국을 바라보는

일본의 본심에 대한 의심도 깊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보다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일본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우월감을 갖고 미래지향적이며 대승적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결국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중국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며 일본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때 우리의 선진국 외교 시대가 열릴 것이다.

-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미중 간의 대립이 한국을 자강의 길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엄중한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중국과 한국은 가치적·문명사적 동류(Like-Minded) 국가가 될 수 없다. 또한 미국의 국내정치 특성상 한국이 어려울 때 미국이 항상 셰이프가드(Safeguard)나 최종 대부자(Lender of the Last Resort)가 될 것이라는 믿음은 비현실적이다. 중국과 미국 모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한국이 이에 반하는 선택을 할 경우 언제든지 국익 차원에서 한국에 등을 돌릴 수 있다. 이제 한국은 미중 사이에 낀 존재에서 벗어나 두 강대국 모두에 필요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강론도 당분간 두 나라와의 협력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먼저 자력으로 생존권을 지키며 강국들의 힘을 1차적으로 견제하고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네덜란드, 이스라엘, 스위스 같은 소강국이나 중강국처럼 핵심기술 및 틈새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스스로 세계에 필수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강국들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국력에 맞게 선진국 수준의 외교역량을 키우고, 외교의 물적, 인적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자강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국내체제 정비가 최우선 과제이다. 국내 정치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그 연장선에서 외교·안보를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국제 외교·안보의 흐름에 역류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단단한 국민 통합력이 있다면 그 앞에서 그들의 압박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 앞으로 한국의 생존 방정식에서 상수인 한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중요한 변수인 중국과 여하히 공존해 나갈 것인지가 한국의 생존에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한-중-일 관계 방정식을 매트릭스로 풀어보면, 한일, 한중, 일중 관계 등 양자관계로 분석할 경우 보다 훨씬 복잡하고(complexity) 갈등적(conflict)이며 깊은 경제적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관계로 표현된다. 따라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주권, 생존권, 정체성을 여하히 지켜 나갈 것인지의 문제에 집중할 경우, 양자관계보다는 3자관계 방정식을 풀어나가야 한다.

- 그동안 3자관계를 양자관계로 분석하며 면의 관계를 선의 관계로 풀면서

*이제 한국은 미중 사이에  
낀 존재에서 벗어나 두  
강대국 모두에 필요한  
나라가 되어야 함. 그러나  
자강론도 당분간 두 나라  
와의 협력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됨. 먼저 자력으로 생존  
권을 지키며 강국들의 힘을  
1차적으로 견제하고 방어  
할 수 있어야 함. 네덜란드,  
이스라엘, 스위스 같은  
소강국이나 중강국처럼  
핵심기술 및 틈새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스스로  
세계에 필수적인 국가가  
되어야 함. 그리고 이러한  
강국들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함.*

앞으로 한국의 생존 방정식에서 상수인 한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중요한 변수인 중국과 여하히 공존해 나갈 것인지가 한국의 생존에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임. 이러한 한-중-일 관계 방정식을 매트릭스로 풀어보면, 한일, 한중, 일중 관계 등 양자 관계로 분석할 경우 보다 훨씬 복잡하고(*complexity*) 갈등적(*conflict*)이며 깊은 경제적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관계로 표현됨.

한국 뿐 아니라 일본, 중국도 복잡성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대응하다 많은 실책을 범하고 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중일 3국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일관계가 더욱 긴밀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양국의 국내정치에서는 민족 감정이 깊게 남아 있어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 또한 한국은 중국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국가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신념을 중국에 각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이외에도 미국과 중국이 모두 아쉬워하는 전략자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누구도 한국이 미국의 동맹 외교에서 가장 약한 고리라는 오판을 하지 않도록 원칙과 자세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에 할 말을 다 한다고 해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전면 부정하거나 중국의 자존심을 지나치게 건드려서는 안 된다. 굴종하지 않으면서도 겸손하고, 분명한 원칙 속에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진핑 권부 내부 및 공산당 내부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 문제가 향후 한중외교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 반면,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도 국익 차원에서 때때로 우리의 원칙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처해 있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위치를 미국이 감안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미국 의회 등 워싱턴 조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활약하며 대화 채널과 인적 네트워크를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의 대미외교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 ❖ 저자 약력

## ■ 정덕구 (NEAR 재단 이사장)

제1대 재정경제부 차관(1998)을 역임했으며, 이후 제2대 산업자원부 장관 (1999-2000)을 지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IMF 구제금융 협상 수석대표 및 뉴욕 외채협상 대표로 활동했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서울대, 중국 북경대, 인민대 초빙교수로 지내며 학계 활동을 펼쳤다. 이후 2007년, 민간 및 독립 싱크탱크인 니어(NEAR: North-East Asia Research) 재단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대표 저서로는 "시진핑 신시대 왜 한국에 도전인가" (2023; 공저), "한국의 새 길을 찾다" (2023; 공저), "극중지계 1, 2" (2021; 공저), "외교의 부활: 다시 그리는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지도" (2021; 공저) 등이 있다.

기획 및 감수: 박동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jpi@jpi.or.kr](mailto:jpi@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